

데스크 시각



박진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지난해 10월31일 밤, 광주시 동구 남동 인쇄거리 입구에 자리한 ‘메이홀’(May hall), 고상한 이들과 달리 낡고 허름한 5층 건물에서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100여 명의 관객들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바라다보이는 공간에서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음악회의 피날레를 장식한 팡페라 가수 정세훈은 “관객들의 살아있는 눈빛을 가까이서 보며 노래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이제 광주를 이야기 하면 메이홀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책 읽는 서울’ 이끈 북페스티벌

젊음의 해방구인 서울 홍익대 주변은 요즘 ‘책 읽는 거리’로 변신 중이다. 지난 2005년 홍익대 앞 주차장 거리에 첫선을 보인 ‘와우북 페스티벌’(Wow Book Festival·와

메이홀과 ‘와우북’

(Wow Book Festival)

우북) 덕분이다. 매년 10월 초 열리는 와우북은 문화기획자 이채관씨가 ‘책을 문화적으로 소비하는 도시’를 내걸고 주민, 상인, 아티스트들과 손잡고 기획한 프로젝트다. 지난해 행사에는 114개 출판사와 77명의 작가, 지역주민 등이 참가해 ‘버룩책방’ 등 93개의 책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6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30여 만 명이 다녀갔다. 와우북은 창설 10년 만에 도시의 풍경을 확 바꾸었다. 우선 해마다 축제에 참가하는 마니아층이 생겼다. 전국에서 올라온 이들은 여행차처럼 트렁크를 옆구리에 끼고 와우북에 ‘입성’한다. 무거운 책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다. 트렁크를 끌고 다니다 마음에 드는 책을 사거나 읽고 커피가 ‘당기면’ 카페에 들어가 마신다. 운이 좋으면 저자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와우북 성공으로 흥대 주변에는 출판사가 운영하는 북카페가 10여 개나 새로 들어섰다. 이제 ‘흥대=클럽’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메이홀과 와우북의 공통점은 자생적인 문화운동으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쇠라한 옛 전남도청 주변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문을 연 메이홀은 목사, 화가, 사업가,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은 물론, ‘따뜻한 모임’ 회원 16명이 꾸린 대안공간이다. 매월 내는 임대료부터 전시·공연까지 모든 운영비는 회비와 열성팬들의 후원으로

충당한다. 와우북 역시 흥대가 지닌 장소성을 문화축제로 확장시킨 케이스. 실제로 흥대 주변에는 등북면 출판사가 5300개나 되고 일러스트레이터 등 인적 인프라를 갖췄지만 이렇다할 존재감이 없었다. 메이홀과 와우북은 도심재생이라는 화두에 직면해 있는 광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는 10월 완공되는 문화전당 주변 일대에는 빈 집과 건물이 400여 채에 이른다. 내년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관광객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려는 광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자생력 지닌 도시재생 돼야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광주시와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지원포럼)이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문화전당 주변 정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포럼이 내놓은 청사진에 따르면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300m 이내 지역의 빈 건물들이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당장 올해 40~50억 원(건물매입비 제외)을 들여 2곳 정도를 문화스테이션 등의 거점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빈 건물이나 공장 등을 문화명으로 성공시킨 사례는 많다. 지난해 취재차 방문한 일본의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역시 90년대 초 방직공장을 지역민들의 문화사랑방으로 되살린 도심재생의 교과서였다. 무엇보다

다 시민디자이너를 도입한 주제적인 운영이 성공비결이었다. 그런 점에서 ‘문화’를 컨셉으로 잡은 지원포럼의 제안은 첫 단추를 잘 꿰 셈이다. 문제는 지속가능한 마스터플랜의 부재(不在)다. 이들 거점공간들이 도심에 꾸준히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자생적인’ 전략을 간과한 것이다. 지원포럼의 계획안대로라면 앞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리모델링에 투입되어야 할 판이다. 하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 ‘외형’을 뜯어고친다고 한들 경쟁력 있는 콘텐츠나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돈만 축내는 예물단지 가 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수십억 원을 들였는데도 ‘티가 안나는’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주민들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이 순환될 수 있도록 도시의 작은 공간들이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당과 어울리는 ‘옛지 있는’ 인프라 못지 않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콘텐츠와 운영전략이 시급하다. 도심재생이라는 명분으로 언제까지 밀빠진 독에 헐레를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작지만 내실있는 제2, 제3의 메이홀과 와우북이 필요한 이유다. /jhpark@kwangju.co.kr

社說

대책 없는 쌀수입 개방 농민 죽이는 일이다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쌀시장 개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익과 쌀 산업을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쌀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통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쌀시장 개방 여부를 오는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에 알려야하므로 6월까지의 정부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3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면 개방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뒤 쌀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2004년까지 10년간 매년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했다. 이후의 무수입물량을 매년 늘리는 대신 2014년까지 개방을 미뤄 올해는 40만8700t을 수입해야 한다. 금년에 재연장 협상에 나설 경우 그 물량은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는 차라리 쌀시장을 개방해

수입 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현재 국산 쌀 가격은 한 가마니(80kg)에 17만4000원 선이어서 관세율 200%만 적용해도 수입 쌀 가격이 훨씬 비싸 쌀산업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전남의 쌀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17만690ha로 국내 전체(83만2625ha)의 20.5%를 차지하는 최대의 ‘농도’다. 그만큼 쌀 개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쌀은 식량주권 및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안보’ 문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쌀 수입 개방은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 등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개방을 운운하기 전에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전남도도 예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농가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 정부에 대책 마련과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빈곤층 생활고 비판 자살 두고만 볼 건가

광주에 사는 김모(39)씨는 지난 2일 동구 학동 A모텔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숙자인 김씨의 사인은 저체온증에 따른 동사(凍死)였다. 만일 그가 구청에서 실시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고 지원을 요청했다라면 매달 생계비 88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일과 3일에는 경기 광주시와 동두천시,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빈곤과 신병을 비판해온 가족이 생을 포기했다. 이러한 비극은 우리 사회 빈곤층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 준다. 동시에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허술한 복지시스템과 사회안전망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광주지역만 하더라도 각 구청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다고 한

다. 홀로 어렵게 살아도 부양 가족이 있다면 이유만으로 지원을 외면 받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여기에 폭증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수요를 감당할 인력도 크게 부족한 데다 까다로운 복지서비스 이용 제도, 민간 후원 연계방안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와 광주시 등이 뒤늦게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고, 박근혜 대통령도 개선책을 주문했지만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아 일과성에 고칠 공산이 크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도움길을 떠나다 주춤하면 ‘모르쇠’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후진적 비극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쉽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완화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험가장’을 대상으로 사회·종교단체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은펜클럽



최영대
전남대 교수·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지난 2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원장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주축이 된 신당 창당과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의 무공천을 선언했다. 예상을 뛰어넘은 합의문에 놀랐고, 그 합의 내용이 희망과 신선함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어 기뻐다. 정치권이 전한 소식으로서 얼마 만에 맞이하는 낭보인가! 주지하다시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내걸었던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대부분 없는 일이 됐다. 한 마디로 거짓말장이 집단들이다. 그 뿐인가.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동원하고도 반성은 커녕 부끄러움도 모른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을 부정한다면

희망의 정치와 호남 지자체 선거

그들을 결코 합리적 보수세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러나 선택의 최종 주인공은 국민이다. 국민이 거짓말 세력, 사비비 자유민주주의자들을 정치의 중심에서 끌어내리려면 대안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국민은 대안도 없이 무조건 기존 세력을 내팽개칠 경우 혼란과 더불어 더 나쁘고 더 무능한 세력이 국가를 통치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우리가 기존 야당들의 취약함을 비판하고 강력한 대안 정당의 출현을 갈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합신당 창당 발표로 인해 중앙정치에 대한 지역민의 걱정은 크게 줄었다. 그렇다면 통합신당의 출현이 우리의 또 다른 관심사인 이 지역의 정치지형과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호남인들은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지역정치를 희생시켰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도, 정권의 향방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조성해야 한다. 호남인들이 안철수 신당(새정치연합)에 대해 상당한 지지를 보인 이유 중 하나로 경쟁이 있는 선거관이 만들어져 보다 좋은 리더들을 선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만들자는 열망 때문이었을 것

이다. 그러나 통합신당의 탄생으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또 다시 경쟁이 있는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는 또 다시 통합신당의 후보들에게 ‘묻지 마 투표’를 해야 하는가? 아니다. 통합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지역에 ‘경쟁이 있는 선거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통합신당이 공천권을 유권자들에게 돌려주면 가능하다. 시·도지사 선거를 예로 들면 호남지역에서 통합신당이 시·도지사 후보를 공천할 때 유권자들의 여론을 100% 반영하는 선출제도를 만들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놓고 절대로 나눠 먹기식 흥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퇴행적 행위이다. 그런 선택은 통합신당의 출발부터 호남인들을 무시하고 희생시키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현직 단체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그런 일방적 선거관에서는 좋은 후보를 발견하거나, 선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연대

나 단일화를 이뤄내 부패를 키우고, 이를 통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진정 경쟁이 있는 선거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래야 공천 폐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광주지역에서만 10여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당공천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 유권자들이 좋은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 고작해 야 득표율 30% 내외의 교육감이 나올 수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입지자들이 진보, 중도, 보수 등 개인의 성향과 교육철학에 따라 단일화하여 본선에서 3-4명의 유력한 후보들이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선거구도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신생 정당은 호남에서 시·도지사의 경우만이라도 정당공천권을 100% 유권자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그래야 중앙정치의 낭보가 이 지역 지방자치까지 희망의 메시지로 확산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성지답게 이제는 우리 모두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자.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이 걸림을 심는 코너입니다.

기고

시민주권시대의 디딤돌, 마을공동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현대의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농촌사회의 전통적 마을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 도시 사회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광주도 지난 2003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했으며, ‘내집앞 마을 가꾸기’,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여성가족 친화마을’,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지방자치의 주요과제인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시민이 정책입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14일, 마을생활권 단위의 지역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의 뜻을 가감 없이 반영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작은 도서관 ▲시민안전 ▲시민건강 ▲학생사랑의 5개 분과로 구성된 ‘마을행복시민협의체’가 출범했다. 현대사회에서 행복한 공동체 조성의 핵심은 물리적 공

간에 대한 개선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다양한 공동체적 가치를 생성한다. 이런 면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인 마을은 연대와 소통이 필요한 시대에 소통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단위이며 공동체 구성원의 안위가 결정되는 공간이다. 광주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한 자원이 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문화적 자긍심과 인본주의 정신은 광주가 마을공동체의 가장 큰 성공요인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훌륭한 인자가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민주·인권·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모든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대중정신은 마을공동체의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동체가 공감하는 생활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마을 속에서,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과정을 거

쳐 지역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람간 신뢰의 회복, 관계의 일상화, 연대의 생활화 등을 통해 ‘광주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참여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와 TF팀은 물론 마을리더,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 등을 통해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사업을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다. 디헝스롭게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참여는 지난해 75개 단체에서 올해 255개 단체로 늘었을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 데 이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도시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갈망이 높고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희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올해는 주민의 목소리와 의지가 담긴 왁자지껄, 시끌벅적한 그리고 광주라는 색을 입힌 ‘마을공동체’라는 멋진 작품을 기대해 두 좋은 듯하다.



김집중
광주시 시민협력관

‘마을’이라는 단어는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심리적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 중장년층 이상 세대에게는 어릴 적 고향의 생각에 젖게 한다.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시대였음에도 많은 사람이 그때 그 시절 과거를 추억하며 살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전통적 마을공동체의 삶이 주는 매력을 경험해 본 덕분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된 국가로, 도시화는 사람과 사람간의 단절, 사람과 자연과의 단절, 사람과 지역사회와의 단절은 물론 현대의 각종 사회

간에 대한 개선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다양한 공동체적 가치를 생성한다. 이런 면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인 마을은 연대와 소통이 필요한 시대에 소통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단위이며 공동체 구성원의 안위가 결정되는 공간이다. 광주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한 자원이 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문화적 자긍심과 인본주의 정신은 광주가 마을공동체의 가장 큰 성공요인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훌륭한 인자가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민주·인권·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모든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대중정신은 마을공동체의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동체가 공감하는 생활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마을 속에서,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과정을 거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우주 우영을 하던 비행사가 우연히 블랙홀(black hole)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일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비행사는 블랙홀의 중심부로 빨려들어가다가, 결국 엄청난 중력 탓에 몸이 옛가락처럼 길게 늘어져 죽게 된다. 또, 그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온갖 물질들은 블랙홀의 중심부에 있는 밀도 무한대의 특이점(singularity point)으로 휩쓸려 들어가 ‘납작하게’ 찌부러진다. 블랙홀에서 일어난 우주비행사의 죽

이 불가늑한 ‘사건 지평’이 블랙홀로 빨려드는 모든 물건들을 외부의 시선에서 차단하는 셈이다. 각 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무한대의 중력을 지닌 블랙홀처럼 지역의 온갖 이슈와 현안들을 단숨에 빨아들이고 정치색을 버무려 몽개뜨린다. 또, 권력에 눈 먼 입후보자들의 닭살 돋는 치적 자랑과 추잡한 상대 비방이 블랙홀 주변에 ‘사건 지평’처럼 주민들의

사건 지평

은 앞에서 진실을 감춰 버린다. 이번 지방선거에

어는 기존 정치집단 극적인 사건은 블랙홀의 무한한 중력을 이겨내지 못한 빛이 끝내 멈춰서며 만들어진 ‘사건 지평(event horizon)’ 안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주선 창가에 초조하게 앉아있는 선장(captain)은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사건 지평’에 막 진입하는 동료의 모습을만 기억할 수 있을 뿐, 더 이상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 불운한 비행사가 블랙홀 주변에 만들어진 ‘사건 지평’으로 진입하는 순간, 그의 몸에 비쳐 반사되던 햇빛마저 블랙홀의 중력에 붙잡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빛조차도 탈출

는 앞서서 진실을 감춰 버린다. 이번 지방선거에

에 대한 실망과 새로 등장한 정치세력에 대한 호기심이 ‘사건 지평’처럼 펼쳐져 ‘선거’라는 거대 블랙홀을 감싸고 있다.

4년마다 돌아치는 광풍이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면서도, 진실이 사라져버린 현실에 허를 찌게 된다.

/홍행기경제부장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언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